



2023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

SUMMARY

정세 및 정책방향

미국	중국	유럽	일본	ASEAN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강도 긴축 지속 미국우선주의 대중 강경책 심화 해외기업 투자 유치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리오프닝으로 경제회복 촉진 경제개혁, 산업 육성 박차 대중 견제 정책에 적극 대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러우전쟁 장기화 에너지 안보위기 EU우선주의제도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금리 기조 유지 투자-성장 방점 한일관계 개선 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매력 하락 및 최저임금 인상 IPEF 참여 RCEP 성과 확대

한국 대응

- 연준 유동성 완화 터닝포인트 주시, 청정에너지 분야 등 바이든 경제정책 비즈니스 기회 적극 활용
- 경제 회복과 내수 확대에 따른 전략 필요, 美제재 적용되는 안보기술 제외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 모색
- 에너지 위기에 따른 녹색전환 가속화, 원전 및 LNG 인프라 투자 기회 적극 발굴
- 저금리, 투자-성장 확대 정책에 따른 전략,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전략 수립
- RCEP 회원국과의 공급망·기술투자 협력에 적극 참여,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우회로로 활용

미국경제



성장세 둔화
물가 안정,
달러 강세

	2020	2021	2022	2023 전망	위험도
GDP(%)	-2.8	5.9	2.0	1.4	●○○
물가(%)	1.1	4.0	6.2	3.5	○○○●
수출(%)	-13.2	6.1	7.4	4.2	○○●○
실업률(%)	8.1	5.4	3.7	4.2	○○○●

*출처: OECD Economic Outlook ('22.11), IMF World Economic Outlook ('23.1)

GDP 고물가·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전망

물가 물가 안정화 가닥, 자산가격 회복과 달러화 강세 완화 예상

- | |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긴축 지속, 상반기 속도 조절 2 미국우선주의 대중 강경책 심화 3 작년 발효된 각종 법안 성과 유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인플레이션 추세가 낮아질 때까지 고강도 긴축 지속, 2023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속도 조정 전망
*현재 연준과 시장이 예상하는 최종 기준금리는 최대 5.25%('23.2월, 4.75) 2 유동성 완화의 터닝포인트 주시, 금리 조정과 실물 경제 사이 시차를 감안한 경영전략 필요 2 중간선거 결과 양원분점 이루어졌지만, 미국우선주의 기조는 초당적, 대중국 강경정책은 심화 전망, 美 중심 공급망 룰세팅(Rule Setting)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갈등 예상
*미국내 외국인투자심사(CFIUS) 강화 움직임 및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"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(리버스 CFIUS)" 추진 등 대중 견제 강화 3 유럽, 캐나다, 호주, 일본 등 가치공유 국가와의 협력 다변화는 물론, 미국발 신규규제에 공동대응 전략 마련 3 바이든 정부가 홍보하는 인프라법, 반도체법, IRA의 성과 마케팅이 필요해지는 시점으로 해외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전망 3 청정투자,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제도의 혜택을 청정에너지,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필요 |
|--|---|

중국경제



성장세 회복
물가 안정화

	2020	2021	2022	2023 전망	위험도
GDP(%)	2.2	8.1	3.0	5.2	
물가(%)	2.5	0.8	2.0	2.2	
수출(%)	1.1	15.6	-1.3	2.0	
실업률(%)	4.2	4.0	4.2	4.1	

*출처: OECD Economic Outlook ('22.11), IMF World Economic Outlook ('23.1)

GDP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점차 성장세 회복

물가 부동산 투자 감소, 내수 부진, 대외 수요 축소로 하락

① 봉쇄 완화 & 경제 회복

① 봉쇄 완화로 인한 리오프닝, 감세정책, 부동산 부양, 유동성 공급 등 민간 지원 강화에 따라 작년보다 성장 가능성 ↑

② 경제개혁과 산업육성

② 中 내수 부양책에 따른 내수시장 공략 본격 추진, 서비스업으로 진출 다변화

③ 대외 리스크 증가에 대한 역대응

② 23년 우선 과제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 선정, 7대 첨단기술 및 8대 산업 육성 등 자체 기술개발 강력 추진

③ 中 국내 자체조달에 따른 對中수출 감소 대응책 마련 및 한국 우위 자체기술에 투자 가속화 통한 한-중 기술격차 유지 필요

③ 中반도체 장비 수입 봉쇄 등 글로벌 대중경제 강화 전망 속, 중국 정부 차원 외자유치 박차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 역대응 가능성

③ 정부조달 등 중국 차원 개방 기회 활용하되, 안보와 직결된 분야 등 제재가 많은 분야는 제외하고 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면밀한 발굴 및 판단 필요

유럽경제



성장세 주춤
여전한 고물가

	2020	2021	2022	2023 전망	위험도
GDP(%)	-6.3	5.3	3.5	0.7	
물가(%)	0.3	2.6	8.3	6.8	
수출(%)	-9.4	10.9	4.9	4.4	
실업률(%)	7.9	7.7	6.8	7.1	

*출처: OECD Economic Outlook ('22.11), IMF World Economic Outlook ('23.1)

*유로화 사용 OECD 멤버 17개국 총계

GDP 구매력 약화, 공급망 차질로 인해 성장 정체 예상

물가 ECB가 금리 인상 기조지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여전

① 러-우 전쟁 장기화

① 러-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, 에너지 등 불안 고조 및 유럽내 극단주의 및 포퓰리즘, 민족주의 등 득세 가능성

② 에너지 안보 위기

② 동유럽권 방산 및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, 서유럽 가치공유 동맹 협력 요구에 적극 참여(우크라 재건 사업 등)

③ EU우선주의 제도 도입

② 전세계적 에너지 부문 및 공급망 손상이 시작된 곳으 에너지 및 원자재 위기 지속, 녹색전환 가속화

③ 원전 및 LNG 인프라 투자,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 기회 모색

③ 탄소국경제도(CBAM) 시범 시행 이어(10월) EU원자재법(CRMA)*, EU역외보조금제도** 등 EU우선주의 제도 연쇄적 도입 예상

*EU 역내 생산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감세, 보조금 지원

**외국 기업이 EU 역내 기업 M&A시 자국 정부보조금 내역 신고

③ 탄소국경세 관련 철강 시멘트 등 취약 산업별 대응책 마련,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영향 분석 등 모니터링

일본경제



회복세 둔화
낮은 물가
상승률

	2020	2021	2022	2023 전망	위험도
GDP(%)	-4.6	1.6	1.4	1.8	
물가(%)	0.0	-0.2	2.3	1.9	
수출(%)	-11.6	11.8	4.6	2.9	
실업률(%)	2.8	2.8	2.6	2.5	

*출처: OECD Economic Outlook('22.11), IMF World Economic Outlook('23.1)

GDP 엔화 약세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회복세 둔화 물가 다른 주요국과 달리 완만한 물가 상승 전망

- ① 저금리 기조, 엔저 유지
- ② 분배보다 투자-성장
- ③ 한일관계 개선 가시화

- ① 23년 4월 신임 일본은행 총재 임명 후에도 저금리 기조 유지될 가능성, 엔달러 환율 급격한 변동시 외환시장 개입 예상
- ② 엔저로 인한 주요 품목 수출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
- ③ 기시다 내각 경제 기본방침(22.6 발표)은 분배보다 투자-성장에 방점, 공급망 지원법 발효로 자국기업 지원
 - *스타트업 투자 10배 증액, 향후 10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에 150조 엔 투자
 - **〈경제안전보장추진법〉으로 “특정중요물자” 11개 지정해 대기업 자금조달 지원
- ④ 日공급망 지원법의 효과 분석 및 우리 공급망 지원을 위한 벤치마킹 필요
- ⑤ 23년 봄 기시다 내각 “평화를 위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전략” 발표 예정,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, 現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는 강력
- ⑥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른 협력사업 재정비, 수출규제 완화시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

ASEAN경제



성장세 확대
안정적 물가

	2020	2021	2022	2023 전망	위험도
GDP(%)	-3.4	3.8	5.2	4.3	
물가(%)	1.4	1.9	4.7	4.4	

*출처: IMF World Economic Outlook ('22.10)

*ASEAN5 기준: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, 태국

GDP 22년 중반 코로나19 제한조치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로 회복세 물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 불가피, 이에 따른 긴축재정 전망

- ① 구매력 감소 & 최저임금 인상
- ② IPEF 참여
- ③ RCEP 성과 확대

- 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속, 구매력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더불어 달러 대비 환율 약세 지속 전망
- ② 아세안 진출 기업은 환율 변동과 인건비 상승 영향 고려 필요
- ③ 아세안 7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참여 결정 했지만, 미중 갈등 속 자국 실리를 위한 협상에 이용할 전망
 - *싱가포르, 브루나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이 IPEF 출범식 참여, 특정 필라(pillar) 최종 참여 여부는 미지수
- ④ IPEF 협상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와 공조 모색 고려 필요
- ⑤ RCEP 발효 1주년, 아세안 교역량 확대 뿐 아니라 화물, 자금, 서비스 유통 확대 이끌고 對中 협력 증가 전망
 - *RCEP 회원국 1~11월 대중국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7.7% 증가
- ⑥ RCEP 회원국과의 공급망 협력, 회원국을 활용한 중국시장 우회 공략 필요



글로벌 싱크탱크 FOCUS

FOREIGN AFFAIRS

How to Stop Chinese Coercion –The Case for Collective Resilience

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방법 – 집단적 회복력

Victor Cha
2023. Jan/Feb 版

<https://www.foreignaffairs.com/world/how-stop-china-coercion-collective-resilience-victor-cha>

SUMMARY

경제를 무기로 한 '중국의 강압'에 美바이든 정부는 우호국 간 탄력적 공급망 구축으로 대응코자 하나 이는 부분적 해결책일 뿐, 파트너 우호국들과 협력하여 <집단적 회복력 (collective resilience)>이라는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

- 중국의 강압 사례로 볼 때 국제사회 디커플링은 매우 어려움
 - * **사례1**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에 대한 반발, 중국의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제한 → 중국 내 노르웨이산 연어 점유율 급감(94% → 37%, 연 6천만달러 규모)
 - * **사례2** 2016년 '사드(THAAD·고고도미사일방어) 배치 반발,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상품 판매 금지(약 156억달러), 부지 제공한 롯데그룹 중국 내 사업장 폐쇄(약 7억5천만달러 손실 추정)
- 中경제무기화 대응은 통상적 방식X, 리쇼어링·프렌드쇼어링 등은 절반의 해결책
 - * 중국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무역 규범 위반 자체 불인정, 중국 정치특성상 내부로부터 반발 어려움
 - * 공급망을 대체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미국, 일본, 한국, 호주 등 우호국 중심의 對中블록 구축 및 중국의 고의존 수입품목 발굴, 同필수품목 수입 제한하는 공동행동이 필요함

- 中의 4대수입국(美, 豪, 日, 韓)이 中 총수입의 30%, 中과 마찰 경험 있는 12개국(加, 佛, 獨 등) 포함시 39% 차지. 특히, 중국의 고의존 수입품목은 16개국에 더욱 집중 경향
 - * 中주요 수입품목 70% 이상 406개 품목 (약 312억 달러 규모), 90% 이상 171개 품목

국기별 일본(114개), 미국(94개), 한국(25개), 호주(14개) 등

품목별 철광석 60% 호주산, 불도저 80%는 미국산, 판지/불펜 90% 일본산, 위스키 80%는 영국산 등

- 중국의 필수수입과 경제보복의 분리대응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
 - * (예시) 한국행 단체관광 불허 vs 삼성전자 반도체 지속수입, 호주 제재 vs 호주산 철광석 지속 수입
 - * (성공적 대응사례) 2010년 중일 영토분쟁 中희토류 대일수출 제한 → 日, 핵심광물 공급다각화 및 해저탐사 투자 성공 (중국 의존도 90% → 58% ↓, 10년간)

대안 ① 中의 필수수입품목 핵심 4개국(美, 豪, 日, 韓)간 공동행동 합의, ② 이를 기반으로 다른 협력국가 동참 설득, ③ 中강압에 의한 경제피해 보상을 대신할 공동펀드 조성 등

BROOKINGS

As Kishida meets Biden, what is the state of the US-Japan alliance?

기시다-바이든 회담과 미일동맹의 국면

Mireya Solis
2023. 01. 20

https://www.brookings.edu/blog/order-from-chaos/2023/01/20/as-kishida-meets-biden-what-is-the-state-of-the-us-japan-alliance/?utm_campaign=Brookings%20Brief&utm_medium=email&utm_content=242731737&utm_source=hs_email

SUMMARY

러-우크라이나 전쟁, 反권위주의 세력의 결속이라는 국제정세 흐름 가운데, 미일 동맹은 '경제안보'를 공통분모로 그 중요성과 의미가 강화되고 있음

- '16년부터 시작된 日의 '자유와 개방의 인도 태평양 구상(FOIP: Free and Open Indo-Pacific concept)'은 바이든의 동맹국 공조 강화 정책에 따라 소(小)다자주의 기조로 심화
 - * 미일 양국, 中·러 견제 및 안보·경제협력 강화 차원 '고위급 2+2 경제대화(외교, 상무)' 발족('22.7월)

이에 '경제안보'를 앞세워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는 일본이 자국 안보개혁 측면에서도 일견 외교적 성과를 보고 있다는 일본내부 평가

- 기시다 총리 방미前,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는 '현대화된 동맹관계' 지지성명 발표
- 러-우 전쟁은 일본 정부와 국민에 '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된 국가'의 중요성을 각인
 - * '22년 말 日정부는 국가안보전략·국가방위전략 등 수정 발표, 유례 없는 최근 안보위협 대처 위한 포괄적 국력동원 준비가 주내용

이번 기시다-바이든 회담 역시 일본이 '미국의 매력적인 동맹국'으로서의 위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

- 美·日 양국은 미일동맹을 점점 더 역내 질서 정립의 대내외 주요 수단으로 활용 중